정부·전남도, 방역 3개월 손 놓고 있다 뒤늦게 화들짝

6월 북한 발병 이후 "유입 비상"
양돈장 울타리 예산 지원 안돼
대비 미흡 소극행정 공포 키워
道, 바이러스 차단 비상방역

정부가 돼지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막는 데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지난 6월 이래 총력 방어 태세에 돌입했으면서도, 정작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의 주범으로 꼽히는 야생멧돼지 농가 유입을 막기 위한 '울타리' 설치에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행정을 펼쳤기 때문이다. 전남도도 예비비를 우선 투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다가 뒤늦게 차단 방역에 들어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후 전남도가 요청한 '울타리 설치 예산'(14억원)을 여태껏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에서 발생한 만큼 국내 상륙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음에도, 3개월이 넘도록 차단 방역을 위한 울타리 설치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애초 야생멧돼지가 이동해 접경지역을 통해 전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 22개 시·군 580개 농가에 울타리 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관련 예산을 정부에서 지원받아 도비를 보태 지원할 계획을 세워놓았다. 전남도는 그러나 농식품부가 당시 국내 유입 가능성을 우려, 북한과의 접경지역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을 내세우면서 지역 양돈농가에 대한 울타리 사업비 지원이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특별관리지역으로 경기 강화·김포·파주·연천과 인천 옹진,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10개 시·군을 지정했었다.

전남도도 정부의 지원 계획만 믿고 예비비 투입을 3개월 넘게 늦추면서 여태껏 전남지역 양돈 농가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사업이 시작조차 못한 상황이다. 전남도측은 "정부 지원 방침이 애초에 없었다면 전남도가 예비비를 우선 투입했을텐데 정부 지원 입장이 나와 기다리다보니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뒤에야 부랴부랴 관련 예산을 지원키로 결정했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하지만 전남도가 정부 예산을 받아 시·군을 통해 내려주더라도 해당 농가가 울타리를 설치하는데까지 1주일 이상 걸린다는 점에서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 안팎에서는 북한에서 발생한 뒤 야생멧돼지를 '숙주'로 삼아 국내로 유입될 수 있다는 점, 돼지 사육두수가 전국 사육량의 10%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차단 방역을 위한 조치가 미흡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전남도는 울타리 설치 예산이 내려오지 않는데 따라 자체 사업비 2억원을 투입, 멧돼지 기피제를 해당 농가에 지급하는 한편, 1억7000만원을 들여 포획 틀 구입비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남도에 따르면 경기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발견된 데 따라 22개 시·군 양돈농가를 중심으로 농장 전체에 생석회를 뿌려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는 등 비상 방역 체제에 돌입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역 양돈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전남 유입을 막기 위한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7일 오후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서은수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과 관계 공무원, 시군 부단체장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김 지사는 도내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 운영,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조치 강화 등 빈틈없는 방역을 주문했다.

2016년 발병, 세계 곳곳 양돈장 초토화…20개국서 유행중

유럽 경유해 급격 확산
中선 1억마리 살처분 추정

세계 각국의 양돈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결국 국내로 전파됐다.

아프리카 지역의 풍토병이었던 ASF는 2016년부터 유럽을 경유해 세계 각국으로 급격히 세력을 확대해 왔다. 특히 작년부터는 세계 돼지고기 생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으로도 퍼져 엄청난 피해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에서 가져온 음식 잔반을 돼지 먹이로 쓴 탓에 ASF가 중국에 전파됐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올해 6월에는 북한도 노동신문을 통해 ASF 유행 사실을 공개하며 전국 단위 방역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17일 국제수역사무국(OIE)에 따르면 8월 30일~9월 12일 사이 ASF가 유행(outbreak) 중인 국가 혹은 지역은 모두 19곳이다. 유럽에선 러시아와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라트비아, 몰도바,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등 10곳에서 ASF가 유행하고 있고, 아시아권 유행 지역은 중국, 홍콩, 북한, 라오스, 필리핀, 미얀마, 베트남 등 7개국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짐바브웨에서도 ASF의 기세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날 경기도 파주의 한 돼지농장에서 ASF가 확진된 만큼 ASF 유행 지역은 모두 20곳으로 늘게 됐다. 한국에서 ASF 발병 사례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국제수역사무국은 보고서를 통해 "유럽에선 2016년 9월 몰도바에서 처음 발병했고, 이듬해 체코와 루마니아에서도 발병사례가 나온 아래 헝가리와 불가리아 등으로 확산했다. 작년 9월에는 벨기에의 야생멧돼지에서도 재발사례가 나왔다"고 밝혔다. 또 "아시아에선 중국에서 작년 8월 첫 발병사례가 나왔고, 올해 1월에는 몽골, 2월에는 베트남, 3월에는 캄보디아, 5월에는 홍콩 등으로 잇따라 확산했다"고 덧붙였다.

ASF는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돼지는 한 번 걸리면 거의 무조건 폐사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 최대 피해국은 중국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최근 ASF 때문에 돼지 100만 마리를 살처분했다고 공식 발표했으나, 전문가들은 실제 살처분 규모가 1억 마리에 육박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로 인해 중국에선 돼지고기 공급량이 급감해 가격이 폭등했고, 일부 지역에선 한 번에 살 수 있는 돼지고기의 양을 제한하는 조처까지 취했다.

베트남도 이달 초까지 돼지 사육 두수의 18.5%에 달하는 470만 마리의 돼지를 살처분했다. 필리핀에선 마닐라 인근 마을에서 ASF 발병 사례가 확인돼 7400여마리가 살처분되고 주변 지역과 격리됐다.

중국과 베트남 등에선 일부 농민이 ASF에 걸린 돼지를 다른 지역으로 팔아치웠고, 돈육이 포함된 잔반을 돼지 사료로 쓰는 바람에 ASF가 더욱더 빠르게 확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가리아에서 돼지 13만마리가 살처분되는 등 여타 ASF 유행국가의 피해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불가리아 정부는 ASF 확산을 억제하지 못할 경우 자국에서 사육하는 돼지 전부(약 60만마리)가 폐사하거나 살처분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안나 카이사 이코넨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지난달 8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파멸적인 동물 질병"에 대한 더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당시 그는 로이터 통신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EU에 있어 ASF와의 싸움은 심각하고 급박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도 지난 13일 사이타마현 양돈장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해 753마리가 살처분된 것으로 전해졌으나, 관련 당국은 ASF가 아닌 일반 돼지열병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에선 1ASF는 발생하지 않았다. 대만도 아직 ASF 청정국을 유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염되면 100% 폐사…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돼지 전염병

■아프리카돼지열병은?

17일 국내 처음 발병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폐사율이 최대 100%에 이르는 무서운 돼지 전염병이다. 이 질병은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하지만 돼지는 한번 감염되면 폐사하는 치명적인 병이다. 아직 백신이나 치료 약도 개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미 ASF가 발생한 중국 등지에서는 불가피하게 대대적인 돼지 살처분이 뒤따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하며 출혈과 고열이 주 증상이다. 고열과 혈액성 설사 등이 동반되는 심급성·급성형은 발병 후 1~9일 중 폐사하며, 폐사율은 최대 100%에 달한다. 급성형보다 증상이 덜한 아급성형은 발병 후 20여일께 폐사하며, 폐사율은 30~70%다. 발육 불량과 폐렴 등 증상이 나타나는 만성형은 폐사율이 20% 미만이다.

이처럼 폐사율이 매우 높아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지만, 아직 사용 가능한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다. 외국 발생국에서는 100% 살처분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감염된 돼지 및 돼지 생산물의 이동, 오염된 남은 음식물의 돼지 급여, 야생멧돼지 등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잠복기는 3일에서 최장 21일이다. 외국 사례로 볼 때 장거리 전파에는 남은 음식물이 주요 경로로 파악되며, 근거리 전파에는 야생멧돼지에 의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야생멧돼지를 통해 국내로 전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남북 접경지역 내 모든 양돈 농가에 야생멧돼지 포획 틀과 울타리 시설을 설치해 대비해왔다. 그러나 북한과 인접한 경기도 파주에서 결국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국내 양돈업계에 큰 충격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멧돼지 없었고 남은 음식물도 안줬는데…발생경로 오리무중

농림축산부 "역학조사 진행중"

17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진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발생 원인이 여러 각도에서 의문을 던지고 있다. 경기도 파주의 ASF 발생 농장의 환경은 ASF를 발병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몇 가지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밀 역학조사에 나섰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에 있는 발생 농장 주변 3㎞ 이내에는 다른 돼지 농장이 없다. 이 농장은 어미돼지(모돈)로부터 어린 돼지(자동)를 생산하는 농장으로, 어린 돼지가 생후 10주가량이 되면 가족이 운영하는 비육 농장 2곳으로 돼지를 옮겨왔다.

일반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 원인으로는 ▲바이러스가 들어 있는 남은 음식물을 먹이거나 ▲농장 관계자가 발병국을 다녀왔거나 ▲야생 멧돼지가 바이러스를 옮기는 경우 등이 지목돼왔다. 그러나 이번 국내 사례의 경우, 그 어떤 경우도 들어맞지 않는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금으로서는 눈에 드러난 발생 경로를 우리들이 당장 확인하지는 못했다"며 "그래서 오늘(17일) 아침부터 역학조사반을 투입해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의 농장은 창문이 없이 완전히 밀폐된 형태의 '무창'(無窓) 농장으로, 외부에서 멧돼지의 출입이 차단돼 있다. 농장주가 최근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농장은 업체에서 사료를 공급받아 돼지에게 먹이고 있어,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지도 않았다. 농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4명 쓰고 있지만, 이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국이 아닌 네팔 출신이다. 이들은 최근 외국을 다녀온 일도 없다고 한다.

/연합뉴스